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서울시민 혈세도 사용

서울시, 청와대소방대 용산 이전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11억4934만원 편성 민주 한병도 의원 "필수 소요 제외 산출 이전비용 496억원은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국가 예산외에도 서울특별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는 청와대소방대 이전을 위해 11억4,934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청와대 내 위치한 청와대소방대의 동반이전을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1억4,934만원을 승인했다.

세부내역별로는 근무 공간 및 소방



한병도 의원

차 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11억, 834만원, 비품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이사비용 충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청와대가 저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반해, 현 대통령실이 고층인 10층 건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고가사다리차와 화학차, 소형펌프차 등 총 3대의 소방차가 관리전환되어 추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청와대소방대와는 달리 집무실과 관저의 공간이 분리되어 이동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도 각각 분리 배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 인원도 기존 30명에서 45명으로 15명 증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민의 혈세도 투입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소방대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산출한 496억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소모될지 모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기념' 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기념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반기문 명예총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을 비롯한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기념 창립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문체부, 국악교육 지키는데 앞장서야”

민주 김윤덕 의원, 박보균 장관에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확실한 명시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지키기 위해 문체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4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성취기준에서 국악을 표현하는 단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악계의 반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서양 작



김윤덕 의원

곡을 전공한 책임연구원 A안, 국악계 5인 의견을 담은 10안으로 나누어 중간제출안이 제시돼 있으나 이 역시 국악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는 평가이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사를 세계사와 따로 배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우리역사와 뿌리를 가르치는 일”이라며 “국악을 서양음악과 따로 분류해 배우는 것 역시 우리나라에서 내고 생긴 음악과 정체성을 배우는 과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들의 수업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성취기준에서 국악을 따로 분류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총괄하고 지켜내야 할 수장인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교육부에 강력 항의하고 교육과정에서 국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의 중심인 국악을 절대 빼면 안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 낼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경수 기자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35% 20년 이상 노후화”

민주 윤준병 의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업무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어업지도선의 35%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서해어업관리단 13척·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



윤준병 의원

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고,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져지게 되면, 불법어업행위 등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조업 지도,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 공공의료정책 과제·방향 모색

도의회-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제1차 공공의료 아카데미'

전북도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공공의료 아카데미'가 열렸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와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박정원, 박두영, 이홍락)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전라북도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공공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도민의 시각에서 찾기 위한 '제1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경재 교수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현안을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도민의 건강행태, 전북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현황 등 의료자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치매유병률 등 도민의 건강결과 등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지역별 필수 의료 체계 등의 불평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성, 미흡한 거버넌스체계 등 현재 전북 공공보건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충분한 인

력 층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 및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기회 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없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전북지역의 의료체계는 10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수는 287명으로 의사 없이 진료를 하는 비율이 전국 3위이며,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우 필수의료인력의 공백이 큰 상황으로 현재 전북도의 주요 추진정책인 공공의대 설립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전북도의 1인당 보건분야 자체 예산은 19,992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가 그만큼 보건분야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희 교수는 “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도내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 의료국 분리 독립,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력 확충,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중소 병원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도(정) 협약 체결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며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제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영석 국장은 “네도시와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제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전북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열릴 '제2차 공공의료 아카데미'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름 소장의 발제와 전라북도의회 오은미(순창) 도의원의 지정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국힘 도당, 신임 주요당직자 1차 23명 인선

주요당직자 인선에 나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문천)이 23명에 대한 1차 인선을 마무리했다.

5일 도당에 따르면 전북도당 윤리위원장으로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를, 도당 부위원장에 장명숙 유엔주 서예

숙, 서정호, 박현규, 조남희, 김동환, 김갑근, 김일환, 박종균 씨 등 10명을 임명했다.

또 △여성위원장 최인선 전 전주시의원, △청년위원장 최현석 △대의협력위원장 김태권 △장애인위원장 김